

전북특별자치도법 '9부 능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통과... 법사위·본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시행령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사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

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

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고,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대기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

문 전 대통령, 서해 피격 관련 검찰 수사에

“국방부·해경·국정원 보고 듣고 최종 승인

판단 근거·정황 안달라졌는데 결론만 정 반대

안보체계 무력화 처사에 유감... 도 넘지 않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령에 보고되고 언론에 공표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 그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임 정부에 대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월북 물의를 했다고 하면서 서 전 실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북이 아니라면 왜 안인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추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그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자료 삭제는 없는 것으로 수차례 드러났다. 팩트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북이 아니라면 왜 안인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추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그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자료 삭제는 없는 것으로 수차례 드러났다. 팩트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북이 아니라면 왜 안인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추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그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자료 삭제는 없는 것으로 수차례 드러났다. 팩트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북이 아니라면 왜 안인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추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그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자료 삭제는 없는 것으로 수차례 드러났다. 팩트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북이 아니라면 왜 안인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추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그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자료 삭제는 없는 것으로 수차례 드러났다. 팩트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전북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지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건강관리 지원(병원, 보건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복지관 등)을 연계해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자가운동·감염병 관리 등의 건강 정보도 제공한다.



웰바이오텍PDRN 투자협약식 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웰바이오텍PDRN 투자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구세현 웰바이오텍PDRN대표, 정성주 김제시장, 유재열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 공공보건의료 지표 발굴·활용방안 논의

도, 제2회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지난 3월 신설 지원단 성과보고

내년부터 책임의료기관 중심

필수보건의료 제공 협력 강화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일 오후 3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일 오후 3시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개최됐다.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공공보건 의료 협력 및 육성,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대표,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하며 올해 4월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그간 추진한 전북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성과가 보고됐다. 또한, 지난 5월 1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전북도의 보건

료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개발을 제안했던 전북도 공공보건의료 지표도 보고됐다. 위원회는 개발된 지표와 지표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방본부, 협력병원 등과 함께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올해는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처음으로 구성·운영된 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주체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협력했다"며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전북도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건강 격차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는 1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남원시 예산안을 민생안정에 초점에 중점을 두고 고강도 현미경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도,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추진... 도민 호응 높아

도내 235개 지구 완료

전북도가 도민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소유권 분쟁 해결 등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올해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98억원(전국위) 투입해 14개 시군 4만6,322필지(28km²)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도를 조사·측량해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돼 2080년에 완료되는 국책사업이다. 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비 236억원을 확보해 도내 235개 지구 12만 3,950필지(73.8km²)에 대한 지적불부합 토지를 완료하며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30% 증가한 사업량을 원활하고 정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지적기준점 측량 드론 측량 지구계측량 등 조기에 착수했다.

현재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완료 후 토지소유자와 경제협의를 진행중이며, 경제협의를 완료하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대행자가 탐을 이뤄 동반성장 경연에 앞장 서고 있으며, 민간업체 참여 확대와 드론 및 GPS 측량 등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1일 철새도래지 유령고창의 동립저수지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 철새도래지 동립저수지 방역 현장 방문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1일 철새도래지 유령고창의 동립저수지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내 발생이 27건, 야생조류 검출이 54건으로 이 중 7건이 전북에서 검출되는 등 지역 내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김 부지사는 동립저수지 내 통제소 3개소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차량 출입 기록부, 차량 소독, 운전자 소독 방법, 차량 내부 소독 등 근무자 행동요령 숙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한 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빈틈없는 방역을 요청했다. /김경수 기자

김 부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추세로 도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축산차량 집중소독과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그리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가금농장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기존에 상시 운영해 온 거점소독시설 16개소를 33개소까지 확대했다. 또한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농장 87호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제한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